

*분단70년, 청소년 통일 의식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통일교육 발전 공개 세미나**





# 목 차

## 개 회

- 개회사 심윤조 외통위 법안소위원장 ..... 3  
환영사 송영근 의원 ..... 5

## 세션 I

### 기조강연

- 한헌수 (송실대총장) ..... 9

### 주제발표

- 정향진 (김해대청고) ..... 21  
· 고경민 (제주대) ..... 27

### 지정토론

- 신희선 (숙명여대) ..... 41  
· 나동주 (전남교육청) ..... 49  
· 정지희 (통일드림) ..... 53  
· 신재표 (통일부) ..... 57  
· 박상화 (교육부) ..... 61

## 세션 II

### 종합토론

- 조정아 (통일연구원) ..... 65  
· 전영선 (건국대) ..... 69  
· 김형석 (새누리당) ..... 73  
·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 75



학교 통일교육 발전 공개 세미나



# 개회사 및 환영사



## ■ 개회사

국회의원 심 윤 조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심윤조의원(서울 강남갑)입니다.

분단 70년을 맞이한 지금, 통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세미나를 공동개최하여 주시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근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류길재 통일부장관님 등 내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독일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 위원회의 출범 등 통일 한국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20% 학생들이 여전히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독은 1978년 11월 ‘학교 교육에서 독일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정해 통일의식 강화와 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후에도 정권을 초월하여 미래를 위하여 꾸준히 준비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밑거름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통일 교육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경제 불황, 출산율 저하, 취업난 등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한반도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러한 통일 준비는 통일 한국의 주역이자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통일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과 국회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일부와 교육부 등 주무부처의 담당자와 현장의 통일교육 전문가 및 교사가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의 통일의식 개선을 위한 건설적 의견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환영사

국회의원 송 영 근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 영 근 입니다.

‘학교통일교육 의무화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분단70년, 청소년 통일의식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학교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와 함께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세미나 주관을 맡아주신 류길재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한 통일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회자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환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합니다. 이는 교육이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통일교육’ 역시 통일의 주체가 될 학생들에게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임을 자각하게 하여, 능동적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수많은 담론 속에서 정작 통일의 주체가 될 미래세대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올바른 통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형식적인 ‘학교통일교육’으로는 미래세대가 통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을 설정하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통일교육’의 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대표발의 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교통일교육 의무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은 향후 국회에서 동 개정안을 심사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세미나를 위해 기초강연을 해주신 한헌수 송실대총장님과 기초발제를 맡아주신 정향진 김해 대청고 선생님, 고경민 제주대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토론자와 패널로 나오셔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통일교육 발전 공개 세미나

세션 I

기조강연

한헌수 (송실대총장)



#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숭실대학교 총장 한헌수

2014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각계에서 통일 담론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통일추진 기구들을 앞 다투어 구성하고 있으며 정부도 청소년 대상의 통일교육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안을 만들지 못했던 통일교육이 뒤늦게나마 국정현안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통일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숭실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사례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바른 통일교육의 필요성

### 1) 통일의 주체인 남과 북의 차이

분단 70년 동안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DMZ)의 철책을 경계로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형성해왔다. 70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경제 사회제도, 통치이념, 윤리체계 등 각 부문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 다른 민족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이질화는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남북 사회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통일 이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첫째, 남북한 간의 이질화는 언어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경험을 담는 그릇’으로서 의사소통과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남북의 언어 이질화로 인해 민족 고유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상적인 소통마저 어려워짐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람이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에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생활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언어문제로 인한 고충을 맨 먼저 토로하는 현실은 언어 이질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 간 과거의 교육과 생활 경험의 차이로 인해 동

일한 어휘를 인식하는 가치체계가 판이하게 작동함은 물론 뜻이 통하지 않은 단어들과 외래어의 무분별한 남용도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일부 어휘의 이질화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간 어휘의 이질화 실태<sup>1)</sup>

어휘	남한	북한
동무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혁명 동지
박애	온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함	근로대중과 피압박 민족의 계급적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계급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선을 베풀 것을 떠드는 착취계급, 특히 <브루쵸아> 대변인들의 기만적 반동적 구호
백만장자	재산이 썩 많은 자	근로인민을 착취, 많은 재산을 모아 놓고 놀고먹으며 더 많은 치부를 추구하는 자본가 놈
사환	관청이나 회사의 심부름꾼	착취계급에 빌붙어 착취와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
재즈	독특한 무도 음악	반동적 <부르쵸아> 음악 조류의 하나로서 변태적 음악
점쟁이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사람	점을 쳐 인민들을 기만하고 돈과 재산을 빼앗는 업을 하는 자
주식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이 공동 투자하여 로동계급 근로대중을 착취하는 기업형태
교회	종교를 같이하는 이들의 조직체	정치적 비호 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 교리와 종교사상을 선전하는 거점
절	불도 수행을 위해 중들이 사는 곳	중들이 부처를 놓고 종교 탈을 쓰고 인민을 기만 착취하며 기생생활 하는 곳

둘째, 남북한 간에는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른 문화 영역에서도 비슷한 이질화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은 남한 문화에 대해 ‘퇴폐적이며 민족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하지만 남쪽에서는 정치적 상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북한 문화를 ‘후진적’이라고 여긴다.

셋째, 남북이 낮은 존재가 돼가는 현상은 사람들의 신체조건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2010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 결과 20대 남성의 신장은 남한

1) 신석환,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방안」, 『사립어문연구』 11권, 사립어문학회, 1998, 13-21쪽 참고.

평균치보다 9cm 작고 체중은 15kg가량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의 외양도 갈수록 달라지는 것이다.

넷째, 남과 북의 극심한 경제적 격차는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물질적 배경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854달러로서 남한의 1970년대 수준이며, 산업구조도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하다. 현재 북한의 교역규모는 2012년 남한의 교역규모에 0.6% 수준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이다. 현재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1975년과 유사하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의 197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이다. 북한의 영양섭취는 남한의 197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이다. 교육 분야에서 북한은 고학력자 비중이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다.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교육수준은 향후 남북 경제통합 시 긍정적인 측면이다.<sup>2)</sup>

다섯째, 남과 북은 사람들의 가치체계에서도 양극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의 체제가 지향하는 목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연유한다.

####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비교<sup>3)</sup>

구 분	남 한	북 한
이념적 가치체계	시장경제적 가치관 * 개인주의 * 진취성 * 경쟁적 * 자율성	사회주의적 가치관 *집단주의 *수동성 *협동성 *단결성
사회적 가치의식	*개방성 *개인적 권리 *합리성 *사교성	*독자성(폐쇄성) *조직의 이익 *충실성 *열정성
선호되는 가치순위	1. 행복한 가족관계 2. 편리한 삶 3. 자유 4. 타인의 인정 5. 국가의 안정	1. 국가의 발전 2. 평등 3. 편안한 삶 4. 행복한 가족관계 5. 자유

이와 같이 남북 간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4년 3월 14일자, 1쪽.

3) 이장호, 「남북한 의식구조의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제3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1997년 4월, 11쪽.

는 정치경제 체제를 같이하는 이민족보다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들 속에서 남과 북이 통일국가를 이뤄야 한다는 당위성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 2) 다름의 극복을 위한 노력

이와 같이 남북한의 이질화는 단순히 상호대립적인 폐쇄적 분단구조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근대화의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중점을 두고 노력을 경주해 온 교류와 협력이라는 단기적 수단을 넘어 상이한 근대화 과정의 통합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남한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에 집중하였고, 북한과의 교류에서는 상호성의 원칙보다는 일방적인 시혜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통일교육에서는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 현실이었으며,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초, 중, 고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통일교육은 첫째,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확산시켰고, 둘째, 통일문제가 북한의 태도나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식을 고착시켰으며, 셋째, 통일의 모습을 물리적 통일에 국한함으로써 남북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바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010년 10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1, 2순위)가 언론이 71%, 인터넷이 49.5%를 차지하였고 학교 수업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불과 12%인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즉 대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다루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문제가 되는, 사건 사고 중심’의 정보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보고서」(서울: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p.4.



1968년 정부가 대학 내 교양과목으로 국민윤리교과를 채택할 것을 권장, 1970년 국민윤리 교과목이 설치,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대학의 국책과목으로 2학점씩 2학기에 걸쳐 이수하였다. 당시 국민윤리교과는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반공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탈냉전의 흐름으로 1990년 국민윤리교과를 대학자율에 맡기면서 선택과목으로 개편되었고 점차 교과에서 사라지면서<sup>5)</sup> 대학에 재학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통일교육은 관련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 혹은 정치학과와 북한학과 등 특정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을 위주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목표는 달성과 거리가 있게 되었다. 즉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하드웨어를 없애버린 결과 점차 대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올바른 통일인식 함양이라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통일교육을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또한 초·중·고에서의 통일교육이 최근에야 환경이 마련되면서 현재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의식은 언론과 인터넷이 맡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어찌면 잘못된 요구일 수 있는 것이다. ‘사건 사고 중심의’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문제아’, ‘못살고 굶어 죽는’, 우리와 경제격차가 40배에 다다른...등의 북한의 환경과 비교되어 남한체제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을 전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70여 년 간의 분단과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일상화되고 무뎠지면서 분단이 일상 또는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일이 ‘나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적극성은 떨어지고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사단의 통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감소하고, 통일에 반대하는 인식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즉 다른 기관의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질문의 방식과 수치가 약간씩 다를 뿐 통일에 대한 적극성은 떨어지고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도 대학

5) 이우영,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 통일학연구원, 「통일연구」 1권 2호, 1997.

생들의 통일의식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6)</sup>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의 '2013년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도 2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통일필요성 인식 54.8%, 20대 40.4%)이었고 이런 현상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통일의 이유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전체	20대
같은 민족이니까	50.6	39.1	57.9	45.2	44.0	36.6	43.0	32.0	41.6	29.5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19.2	22.5	14.5	18.2	23.4	26.2	24.1	30.7	27.3	34.9
선진국이 되기 위해	18.7	22.8	17.1	23.9	18.6	24.5	20.7	24.1	17.6	22.8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8.9	11.9	6.8	8.6	8.5	9.2	7.0	8.6	7.2	8.1
북한주민도 잘살기 위해	1.8	2.3	2.8	2.2	4.2	2.0	4.0	3.0	4.9	3.1

또한 주목해야할 것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특징이 성인의 경우와 달리 통일문제를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0대 응답률은 '같은 민족이니까' 29.5%,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34.9%,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22.8%,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8.1%,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3.1%로 나타나 전체 응답과 비교 하였을 때 '한민족'의 당위적 이유보다 '전쟁위협', '선진국'과 같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통일은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20대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22.9%)보다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77.1% 응답하고 있다.

대학생 또는 20대의 통일의식을 연도별, 또는 전체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이 저조하며 남북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에 대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생 청년의 경우 초중고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때문에 통일교육은 제외되었

6)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제70호(2014)내용.

고, 대학에서조차도 통일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리고 통일이후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70여 년간의 분단의 과정과 그 사이에서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복지, 인권, 민주, 평화로운 삶 등)을 미루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비극적인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한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통일이 개인에게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은 교육기회의 확대를 모색하고 분단 상황이 얼마나 개인에게 평화적이지 못한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문에 한민족의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학생들은 딱딱한 문서 보다는 멀티미디어 등의 매체가 익숙하며 주입식보다는 참여하는 수업을 더욱 선호하는 세대로 이들에 맞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3. 통일교육의 방향

#### 1)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방향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학에서의 통일과 북한관련 수업은 특정학과 또는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단의 해소와 한민족의 통일은 몇몇의 소수만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는 가능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로 분단국의 시민이라면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해 모두가 의견을 갖고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할 사안이다. 국민통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통일은 10-20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20년 후 통일의 주역은 현재의 대학생 청년들일 것이라 예상 가능한데 특히 20대 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은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대학생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북한교육이 행해지는 현행 대학통일교과과정을 보완하여 모든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장의 마련과 함께 둘째, 학생 개개인이 균형적인 통일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정치에 편중되지 않은 평화로운 삶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확대는 물론 통일교육의 양적확대를 위해 통일과 북한관련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sup>7)</sup> 셋째, 대학생들의 통일교육에서는 주입식 강의 중심이 아닌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존 통일교육이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의견이 다수이며 이는 기존 통일교육이 주로 교수자의 주입식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이며 학생들은 대부분 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현장체험학습을 선호 하였고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강의가 그 뒤를 이루었다.<sup>8)</sup> 즉 대상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숭실대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지금 현재 초중고의 통일교육은 교육부 중심으로는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각 대학의 통일과 북한관련 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최근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통일캠프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또한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통일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과과정 보완을 통해 2014년부터 숭실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교양필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수업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교육을 구지 대학에서 해야 하는가?”, “꼭 ‘민감한’ 통일교육을 해야하는 것인가?” 등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2014년 한해 3200명의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1학기과 2학기에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 해를 평가하자면 대형 강의의 문제점, 그로 인한 학생참여의 제한, 통일에

7) 이 경우 고려해야할 점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교과목이어야 하며 여기에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는 주제의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통일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 통일문제에 관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주제는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통일 미래상과 같은 통일이후의 상황전개에 관한 것들에 관심 있어 하였다. 2004년 민주평통, 2012년 통교협 조사내용.

8)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제70호(2014)내용 참조.

무관심한 학생들의 ‘교양필수’에 대한 거부감 등이 존재했다. 또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과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의 간극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통일교육 내용에 있어 ‘알아야 하는 것’과 ‘알고 싶은 것’ 모두 중요하다면 통일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했다.

멀티미디어와 참여형 수업의 방식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고, 교양필수 수업 내에서 시간과 내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일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방법, 현장학습 등이 모색되었다. 물론 수업내용에 있어서도 정치중심의 통일논의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과 평화와 사람 중심의 주제로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2015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알아야 할 내용’과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업 내용을 수정하였고, 멀티미디어와 온라인 방식에 익숙한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사이버 수업으로 형식을 변화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론수업과 함께 <승실통일리더십스쿨(3박 4일 캠프)>에서 통일의 주제를 참여형 수업(CPS 기법), 체험학습(조별 임무 수행), 분단지역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여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하였다.

2015년 3월부터 승실대학교 학생들 모두는 이론수업과 3박 4일 캠프 형식의 교양필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미 2월 예비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과목에 대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3박 4일 승실통일리더십 스쿨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불안감’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통일교육이 잘 되지 않은 지난 시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통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통일교육원의 교육만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부는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대학은 교과과정 개편은 물론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 및 현장체험 수업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맺음 말

남북한은 70년의 분단 기간 동안 일시적인 관계 개선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립관계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심화시켜왔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주체가 있는 것이어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소홀하다 한다면 그만큼 통일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서 준비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통일 한국의 격에 맞는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바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은 통일 한국의 국가 모형, 즉 우리 모두가 살만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지키고자 하는 국가체제여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 자주 등의 보편적 가치가 생동하는 사회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은 세계사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 과정이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첨경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균형 있는 외교관계를 통해 긴장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물결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통일 한국의 격에 맞는 시민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 한국의 격에 맞는 시민정신이라 함은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인 ‘의사의 자율성’, ‘행동의 자기 결정성’, ‘행위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들 수 있다. 또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고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정신, 즉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지양하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되 사회의 지도층일수록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정신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통일교육의 총체적인 방향은 통일 한국의 비전의 실현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 발전 공개 세미나

세션 I

## 주제발표

정향진 (김해대청고)

고경민 (제주대)





#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의무화의 필요성

정향진

## I. 서론

분단 70년, 분단 상황에 태어나 북한을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다른 나라쯤으로 알고 자란 세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감정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 주변의 북한 이탈주민을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생각하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학교 통일 교육을 통해 북한을 위협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질적 관계라는 긍정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 과거 냉전시대로 대표되던 이데올로기의 대결을 지나 더 이상 통일교육은 이념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은 알게 모르게 부모나 뉴스에서 전해지는 사회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로부터 왕따와 폭행을 많이 당해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없어 북한 아이들만 다니는 대안 학교로 전학을 많이 왔다는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과거 기성세대가 받았던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기성세대 못지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갈등 최소화 방안을 창출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된 독일처럼 통일교육은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여야를 초월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통일로부터 무관심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이념 교육이 아닌 통일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통일 교육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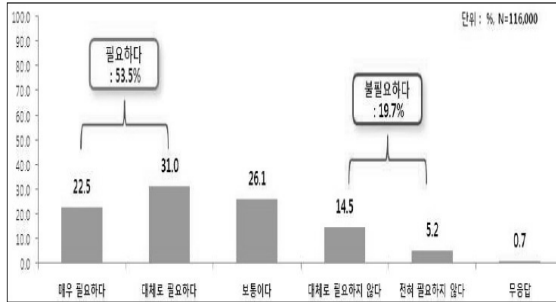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0개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보고서<sup>1)</sup>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3.5%였다.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통일에 관심이 없다', '통일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등의 의식이 팽배해 있다. 치

1) 2014년 6월 통일교육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0개교 학생(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116,000명)과 교사(초등학교 전원, 중/고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담당교사 3,130명)를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 1)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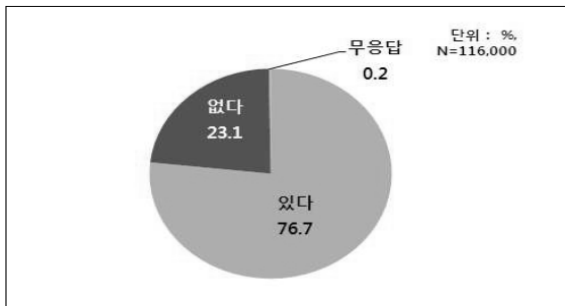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



전 체	학생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필요	불필요	
		(%)	(%)	(%)	(%)	(%)	(%)	(%)	(%)	
전체	116,000	22.5	31.0	26.1	14.5	5.2	0.7	53.5	19.7	
성별	남성	60,533	25.6	30.4	23.7	13.0	6.3	1.0	56.0	19.3
	여성	55,467	19.1	31.7	28.7	16.1	4.1	0.4	50.8	20.1
학교급	초등학교	13,783	44.1	27.0	17.1	8.1	2.9	0.9	71.0	11.0
	중학교	53,596	22.9	31.3	26.6	13.3	4.9	0.9	54.3	18.3
	고등학교	48,621	15.9	31.9	27.9	17.6	6.2	0.5	47.8	23.8

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71%, 중학교 54.3%, 고등학교 47.8%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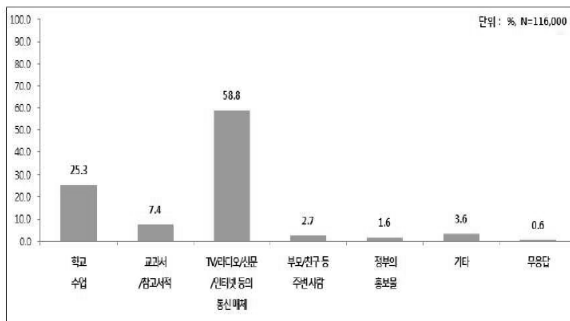
[복한 및 통일 관련 교육 경험]



전 체	학생수 (명)	있다	없다	무응답	
		(%)	(%)	(%)	
전체	116,000	76.7	23.1	0.2	
성별	남성	60,533	75.6	24.1	0.3
	여성	55,467	77.9	21.9	0.2
학교급	초등학교	13,783	90.0	9.8	0.3
	중학교	53,596	80.9	18.8	0.3
	고등학교	48,621	68.2	31.5	0.2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복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있다'의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없다'의 응답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교육의 경험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한 및 통일 관련 정보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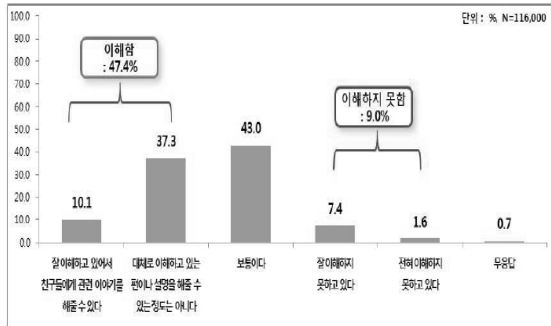


전 체	학생수 (명)	학교 수업	교과서/참고서적	TV/라디오/신문/인터넷/통신매체	부모/친구 등 주변 사람	정부의 홍보물 (책자, 포스터 등)	기타	무응답	
		(%)	(%)	(%)	(%)	(%)	(%)	(%)	
전체	116,000	25.3	7.4	58.8	2.7	1.6	3.6	0.6	
성별	남성	60,533	24.8	7.1	57.8	3.1	1.9	4.6	0.8
	여성	55,467	25.7	7.8	59.9	2.4	1.3	2.5	0.5
학교급	초등학교	13,783	42.8	11.1	37.6	3.3	1.5	3.0	0.6
	중학교	53,596	28.9	8.7	53.4	3.0	1.7	3.6	0.7
	고등학교	48,621	16.3	5.0	70.8	2.2	1.5	3.7	0.6

평소 복한 및 통일과 관련한 정보 채널에 대해서 '학교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TV/라디오/인터넷/신문 등의 통신매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교육의 수업 시수나 내용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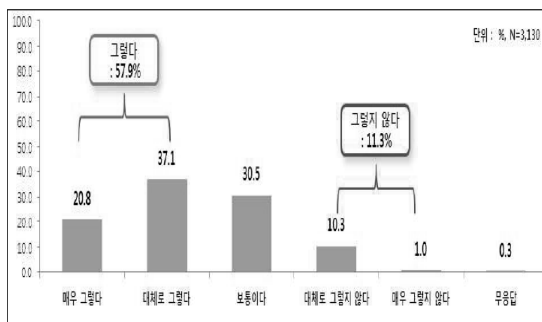
전 체	학생 수 (명)	이해 수준									
		잘 이해하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편이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보통이다	이해하지 못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이해함*	*이해하지 못함*		
전체	116,000	10.1	37.3	43.0	7.4	1.6	0.7	47.4	9.0		
성별	남성	60,533	11.3	34.7	43.2	7.8	2.2	0.8	46.0	10.0	
	여성	55,467	8.8	40.1	42.8	6.9	1.0	0.5	48.8	7.9	
학교급	초등학교	13,783	14.3	44.6	35.7	3.7	1.0	0.6	58.9	4.7	
	중학교	53,596	10.5	36.7	44.0	6.2	1.8	0.8	47.2	7.9	
	고등학교	48,621	8.4	35.8	43.9	9.7	1.6	0.6	44.2	11.3	

통일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이해수준에 대해서 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통일교육의 노출 빈도가 초등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의식 및 태도적 측면이 모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는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었으나 중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 통일교육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중학교 2학년에서 주로 다루어져 교과를 통한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중학교 2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통일관련 내용이 대폭 감소하였다. 기존 고교의 1학년 필수 과목이던 도덕이 사회교과군 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에서 통일교육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2)</sup> 이러한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실태가 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반영하듯이 통일교육의 노출빈도가 많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보다 모든 질문에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일선 교사들의 통일 교육에 대한 반응

[학교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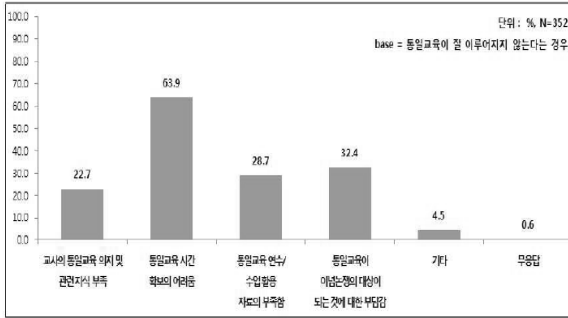


전 체	교사 수 (명)	응답 수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3,130	20.8	37.1	30.5	10.3	1.0	0.3	57.9	11.3		
성별	남성	921	18.8	36.4	31.3	12.2	1.3	0.1	55.2	13.5	
	여성	2,209	21.7	37.4	30.2	9.5	0.8	0.4	59.1	10.3	
학교 특성	초등학교	1,809	29.0	42.8	21.8	5.7	0.4	0.3	71.8	6.1	
	중학교	759	10.1	34.1	43.0	12.0	0.7	0.1	44.3	12.6	
	고등학교	562	8.9	22.8	42.0	22.8	3.0	0.5	37.7	25.8	

학교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서도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 온도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렇다'의 응답률이 아주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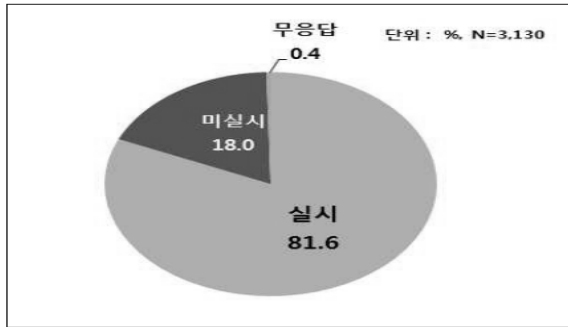
2) 통일부 통일교육원,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교과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이미경, 2011.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전 체	교사수 (명)	교사의 통일교육 의지 및 관련 지식 부족	통일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	통일교육 연수 및 수업 활용 자료의 부족함	통일교육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기타	무응답	
		352	22.7	63.9	28.7	32.4	4.5	0.6
성별	남성	124	21.8	71.0	29.0	28.2	5.6	0.8
	여성	228	23.2	60.1	28.5	34.6	3.9	0.4
학교급	초등학교	111	27.9	49.5	32.4	31.5	3.6	0.0
	중학교	96	19.8	71.9	30.2	31.3	5.2	0.0
	고등학교	145	20.7	69.7	24.8	33.8	4.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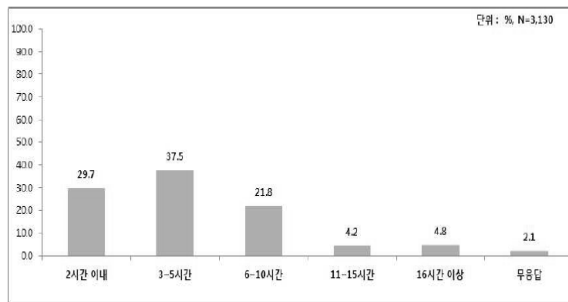
[통일교육 관련 수업 실시 여부 및 미 실시 이유]



전 체	교사수 (명)	통일수업 실시 여부				미 실시 이유			
		실시	미 실시	무응답	교사수 (명)	학년말 수업시 부족	수업시간 부족	미충족에 따른 부담감	기타
3,130	81.6	18.0	0.4	564	54.7	44.1	1.2		
성별	남성	921	80.2	19.2	0.5	177	52.0	47.5	0.6
	여성	2,209	82.2	17.5	0.3	387	55.9	42.5	1.6
학교급	초등학교	1,809	92.9	6.8	0.3	123	68.7	29.7	1.6
	중학교	759	71.8	27.5	0.7	209	57.4	42.6	0.0
	고등학교	562	58.5	41.3	0.2	232	44.8	53.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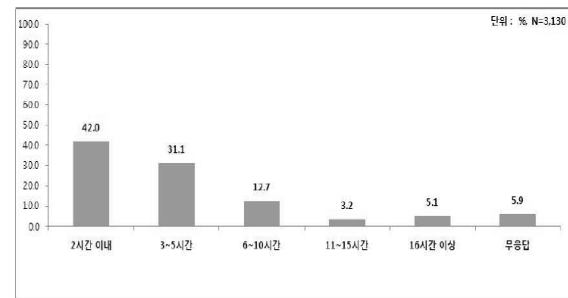
학교 통일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일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일교육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32.4%, ‘통일교육 연수 및 수업 활용 자료의 부족함’이 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 내 통일교육의 교과목 편성 및 시수 부족에 따라 통일교육이 약화되는 문제가 교육과정의 입시위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 운영시간]



전 체	교사수 (명)	2시간 이내	3~5시간	6~10시간	11~15시간	16시간 이상	무응답	
		3,130	29.7	37.5	21.8	4.2	4.8	2.1
성별	남성	921	29.1	35.9	22.4	4.7	5.5	2.4
	여성	2,209	29.9	38.1	21.5	4.0	4.5	1.9
학교급	초등학교	1,809	12.1	44.3	29.6	6.0	7.0	1.0
	중학교	759	45.6	31.5	14.4	2.4	2.1	4.1
	고등학교	562	64.8	23.7	6.6	0.9	1.2	2.8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통일교육 운영시간]



전 체	교사수 (명)	2시간 이내	3~5시간	6~10시간	11~15시간	16시간 이상	무응답	
		3,130	42.0	31.1	12.7	3.2	5.1	5.9
성별	남성	921	42.7	32.7	11.5	3.0	4.8	5.3
	여성	2,209	41.7	30.4	13.3	3.2	5.3	6.2
학교급	초등학교	1,809	35.0	35.3	15.5	4.9	6.8	2.5
	중학교	759	54.0	25.2	8.6	0.9	1.2	10.1
	고등학교	562	48.2	25.6	9.4	0.5	5.0	11.2

교과 시간에서의 통일교육을 연간 몇 시간 정도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5시간 이하가 67.2%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시간 이내가 64.8%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에서 통일교육을 연간 몇 시간 정도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도 ‘2시간 이내’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5시간’ 31.1%, ‘6~10시간’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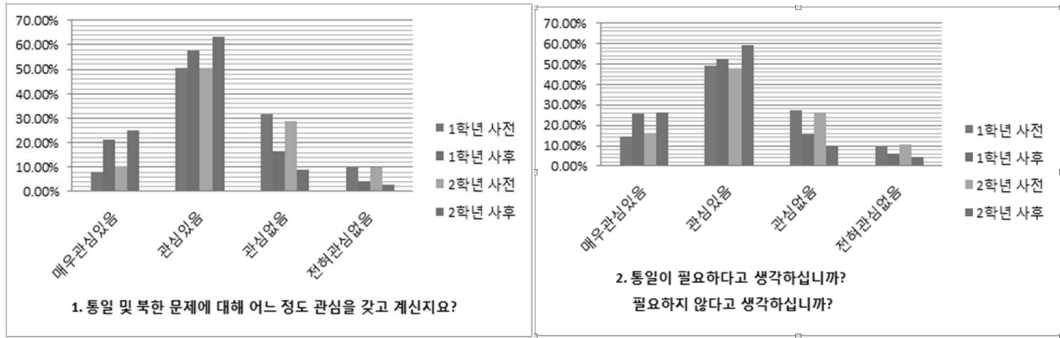
### Ⅲ. 학교 통일교육 의무화의 필요성

지금까지 학교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현행 청소년 통일교육의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통일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현저히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통일교육의 시수와 내용의 축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현행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 내 통일관련 내용이 대부분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이 생략되거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가 낮아 학습동기가 낮으며 이는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통일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지루하고 딱딱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독도교육이 중요함에도 입시교육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지난 2013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연간 10시간 내외의 독도교육을 할 것을 일선학교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과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시간 등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과 동북아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밀려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시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난 3년간의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통일교육은 수업시간을 통해 듣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통일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통일교육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처음 통일교육을 시작하기 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 통일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 이외의 창의적 체험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보고 듣고 느끼는 만큼 통일의식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sup>

3) 김해대청고등학교,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청소년 통일 의지 함양」, 201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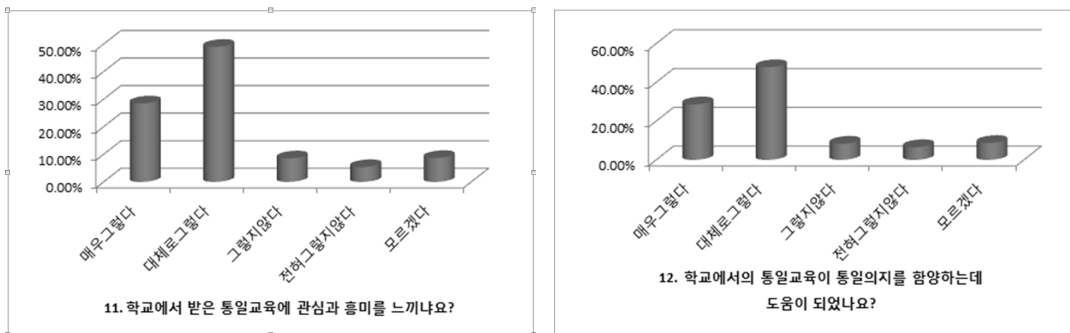


문항1	매우관심있음	관심있음	관심없음	전혀관심없음
1학년 사전	7.87%	50.66%	31.71%	9.76%
1학년 사후	21.19%	57.75%	16.67%	4.39%
2학년 사전	10%	50.66%	28.81%	10.04%
2학년 사후	24.87%	63.31%	8.86%	2.96%

문항2	매우관심있음	관심있음	관심없음	전혀관심없음
1학년 사전	14.23%	49.40%	27.10%	9.27%
1학년 사후	25.93%	52.41%	15.74%	5.93%
2학년 사전	15.93%	47.40%	26.00%	10.67%
2학년 사후	26.50%	59.26%	10.03%	4.21%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일교육 이후 1,2학년 모두 통일에 관심이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는 답변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년 통일교육을 받은 1학년보다 2년 동안 통일교육을 받은 2학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매우그 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모르 겠다
28.47%	48.98%	8.52%	5.37%	8.66%

매우그 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모르 겠다
28.63%	47.82%	8.29%	6.55%	8.70%

학교에서 받은 통일 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77.45%의 학생들이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해 학생들이 본교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학교통일교육이 통일의지 함양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6.45%의 학생들이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 시범학교에서 개발하고 검증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학교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한다면 통일로부터 멀어진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방향

고경민(제주대)

## 1. 들어가며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북한 권력체계의 불안정성 증가와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경제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 변화의 조짐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2014년 연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면서 통일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제 통일은 당위나 담론의 차원을 넘어 현실과 정책의 문제로 전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통일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유보적 견해가 확산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약화가 두드러졌는데, 통일 미래를 책임질 이들의 통일의식 약화는 통일 준비와 과정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대국민 통일교육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진력해 온 정부 통일교육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 및 역량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과 통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증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 통일교육은 공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로 인해 통일교육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로 구분되는 기존 통일교육 체계 내에서 대학생은 어디에서도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생은 통일교육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고 있다.

사실, 통일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통일의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도록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에 직면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을 돌아보고, 대학과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통일교육 의무화와 관련, 초·중등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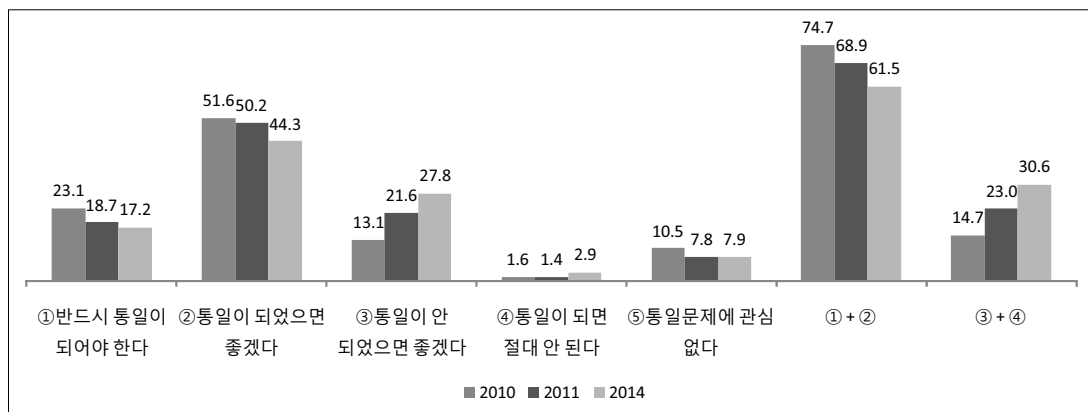
## 2. 대학생의 통일의식 실태

그동안 수행된 통일교육 관련 설문조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경향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역시 초·중·고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때(통일부, 2009; 이미경, 2011: 2),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역시 청소년 일반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통일 관련 의식 변화와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2004년부터 ‘대학생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고, 특히 매년 동일한 설문을 통해 대학생 통일의식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해 오고 있는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대학생 통일의식의 대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그림 4>는 2010년,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중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대학생 통일의식의 흐름과 변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대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지만, 해가 갈수록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당위적 인식에 대한 비중이 현실적 이해관계나 실용주의적 인식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혼란, 사회적·사상적 혼란과 갈등 같은 문제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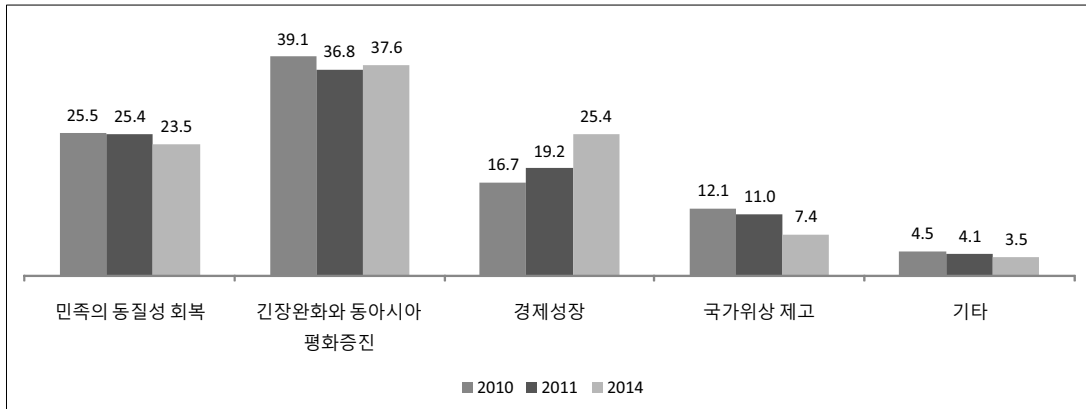


\* 참고: “③통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설문 항목의 경우, 2014년 조사에서는 “통일이 안 되어도 괜찮다”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설문했음.

자료: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201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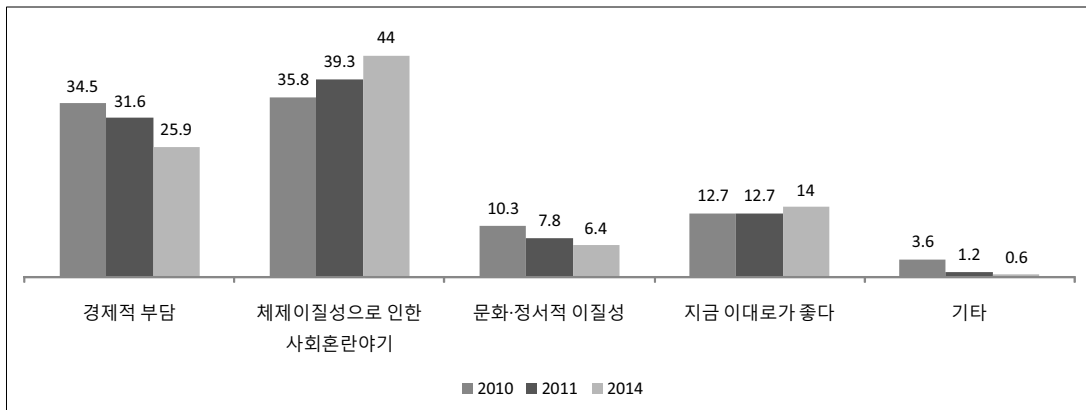


<그림 2>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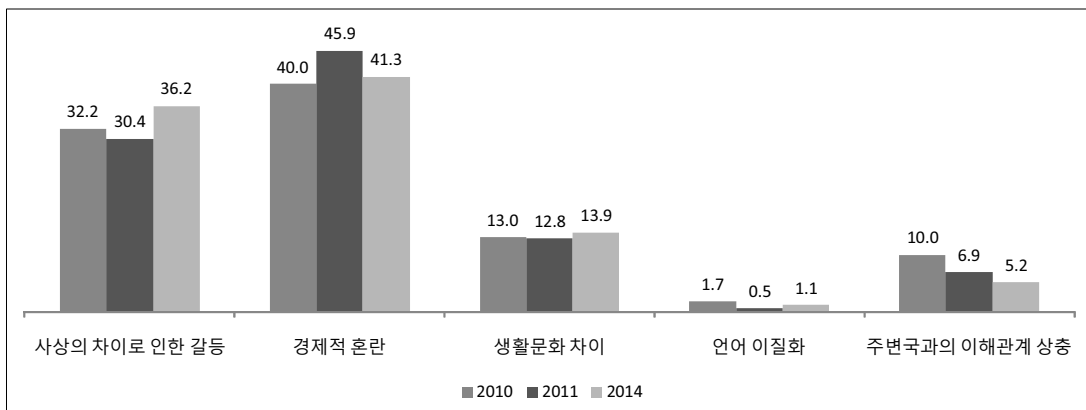
자료: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2014: 21).

<그림 3>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자료: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2014: 22).

<그림 4> 통일 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자료: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2014: 29).

한편, 세대별로 통일의식 조사를 수행해 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3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9~29세는 40.4%, 30대 51.6%, 40대 60%, 50대 이상 62.7%로 나타났는데, 30대부터 60대까지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가장 젊은 연령대인 19~29세 응답층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박명규 외, 2013: 28). 20대가 모두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생의 대부분이 20대라는 점에서 이 조사 결과는 20대와 대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의 약화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몇몇 조사 자료만으로 대학생의 통일 인식 전반에 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약화 경향이 일반적 추세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대학생 통일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변중헌, 2012: 162-169; 이미경, 2014: 177-180).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약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현황부터 살펴보자.

### 3.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

현재 대학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나와 있다. 동법 제8조 ③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부의 대학에 대한 권장 조치를 규정한 것이며, 대학은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 국민윤리 과목 변천사

연도	주요 내용
1968	• 정부, 각 대학에 국민윤리 과목의 교양과목 채택을 권장
1970	• 각 대학에 국민윤리 교과목 설치(「교육법」 시행령 제119조를 개정, 2학점 필수과목 지정)
1981	• 필수과목 지정(2학점씩 2학기 동안 이수), 이념교육 강화
1989	• 국민윤리 과목의 교양과목 채택을 각 대학 재량에 맡김(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민윤리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편)
1990	• 문교부, 대학 국민윤리 과목의 존폐 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일임

자료: 이우영(1997: 55) 발췌.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 보면 대학 차원의 통일교육은 의무였는데, ‘국민윤리’ 교과가 바로

그것이였다. 반공·안보교육이라는 비판 속에 ‘국민윤리’ 교과는 1970년부터 1988년까지 정부에 의해 이른바 ‘국책과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다가 1989년 이후 교양선택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통일교육도 대학 자율에 맡겨졌다. <표 1>은 국민윤리 과목의 위상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간략한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일찍이 대학에서 ‘통일교육의 의무화’를 경험한 바 있다. 반공이나 안보교육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약 19년 동안 국민윤리 교과는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민윤리 교과의 의무화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교양과정이나 전공과목에서 부분적으로 통일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다(이우영, 1997: 55-56; 이미경, 2014: 181).

이러한 변화로 대학 차원의 통일교육은 학교에 따라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학내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를 맞았다.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경향신문』, 1993/09/25)을 목표로 1994년 동국대에 북한학과의 처음 개설된 것이다. 이후 명지대(1995년), 관동대(1996년), 고려대(1997년) 등에 북한학과의 잇따라 개설되었다. 동시기에는 북한학과의 없는 대학에서도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이 교양과목으로 또는 정치외교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되면서 대학 내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대학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관심은 북한학과의 부침과 함께 했다. 1990년대 중 후반 국내 6개 대학에 개설되었던 북한학과는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학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북한학과의 폐지나 유사학과와의 통폐합 등으로 현재는 동국대와 고려대에만 남아 있고 입학 정원도 축소되었다(The Daily NK, 2011/04/07). 그런데 위기의 북한학과는 2010년대 초 다시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폐과 위기에 처했던 동국대 북한학과의 경우,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다시 주목 받았고(『경향신문』, 2011/12/20),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 정부가 통일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북한학과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한국경제』, 2014/05/12).

이처럼 거칠게 요약된 대학 통일교육 현황을 검토해 볼 때, 안정적인 대학 통일교육은 요원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경쟁력과 취업률이 대학 지고(至高)의 가치가 되는 오늘날 대학의 재량과 자율에 통일교육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대학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학생들, 즉 초·중등 예비교사들이 수학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 통일 의식 약화의 여파는 훨씬 폭 넓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중등 통일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들에게는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가 필수적인 교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은 교양과정 또는 윤리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 심화과정 속에 개설되어 있지만, 대부분 필수과목보다는 선택과목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은 다

른 영역 및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차승주, 2010). 또 도덕·윤리 과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서는 윤리교육과를 중심으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개설된 과목들은 대부분 전공 선택이거나 선택 교양 과목이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스스로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도덕·윤리과 교사를 제외한 타 교과 교사들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역사·지리교육과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관련 학과들은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거의 개설하고 있지 않다(차우규, 2003: 214-218; 차승주, 2010).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의 과업은 개인적 차원의 관심이나 역량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개인 각자의 관심과 의지에만 통일 문제와 통일교육을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4.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

### 1) 대학 내 통일교육의 취약성

대학 내에서의 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과 학생들의 수강을 통해 대학 사회 전반에서의 통일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통일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통일관련 강좌는 소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실시되며, 강좌 개설 현황이나 교수 내용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우영, 1997; 이경태, 2004; 강성운 외, 2005; 고성준, 2009; 변종현, 2010; 2012). 또 통일교육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의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영하, 2005: 200; 안득기, 2007).

이처럼 오래 전부터 대학 통일교육이 교육 목표나 교육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는 무엇보다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좌 개설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반 대학’에서는 주로 정치외교학과나 북한학과 등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에서는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은 교양과정 또는 윤리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 심화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많은 경우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어서 다른 영역 및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편,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의 경우도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으로 적어도 1과목 이상은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대학과 마찬가지로 개설된 과목의 대부분이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 선택 또는 선택 교양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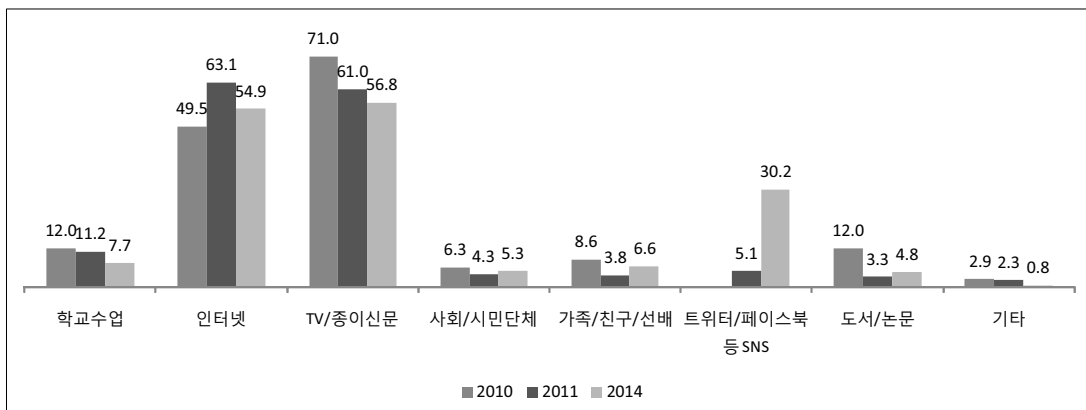
목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임용고사에서 출제 비중이 낮은 북한 및 통일 관련 분야의 교과목을 수강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차승주, 2010: 10).

많은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를 기대하는 어려웠던 데는 통일교육의 목표나 효과 달성을 제약한 적어도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학 통일교육의 대상이 특정 전공 학생 내지는 관심 있는 소수의 학생들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윤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등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를 다루는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일반 대학생들이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및 통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교양이든 전공이든 수강 기회가 있지만, 그런 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는 통일 관련 교과 수강의 기회조차도 거의 없을 수 있다(이우영, 1997: 64).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 내용에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양과목의 경우, 북한이해와 통일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공과목은 북한체제와 정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양과목의 수준에서는 북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전공과목에서는 북한의 사회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변중헌, 2010: 309).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개설된 교과목의 수업시수 부족과 담당교수들의 정치적·이념적 편향과 능력 문제, 제한적인 교수-학습 방법 등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통일교육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형식적인 통일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대학 통일교육은 대학생들이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로도 미미한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통일/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주요 통로(1+2순위)



자료: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2010: 24; 2014: 41).

<그림 5>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1+2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언론과 인터넷이 주요 통로인 반면, 학교수업은 10%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통일/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통로 중 가장 신뢰하는 수단(1+2순위)’을 묻는 2014년 조사에서는 TV/중이신문(53.4%)이 가장 높고 포털, 온라인 미디어(33.8%), 도서/논문(32.5%), 사회/시민단체(14.2%),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13.4%) 순이었고, 학교수업(11.1%)은 이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4: 42).

## 2) 통일부 대학 통일교육 사업의 제한적 효과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건전한 통일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통일부, 2014: 215).

첫째,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대학(원)생들의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도모하고 있다. 198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32회째를 맞은 2013년에는 65편의 응모작 중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3편, 입선 7편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둘째, ‘통일포럼’은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통일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개 대학교에서 통일 특강, 세미나 등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통일아카데미’는 통일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능동적 차세대리더 양성을 위해 주요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공모, 특별과정 개설을 지원하며, 강좌와 현장체험 그리고 포럼 등 다양한 교수방식을 병행해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2013년에는 통일환경·남북관계·북한 실상·통일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5회의 특별강좌 형태로 4개 대학교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2006~2009년 ‘북한학과 합동 워크샵’, 2010~11년 ‘평화통일대행진’, 2012년 통일준비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학(원)생 세미나’ 및 ‘대학생 특강’ 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통일부의 대학생 대상인 통일교육 사업들은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능동적 참여를 유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발표·토론 등을 통해 남북관계 상황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북한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연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통일포럼’, ‘통일아카데미’ 등의 사업들은 전국 대학생 수에 비해 사업 참여 대학생의 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 사회 전반으로 통일논의를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 3) 대학 통일교육의 모호한 위상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 통일교육체계 내에서 대학생의 위상은 모호하다. 대학생은 학교 통일교육의 대상인가 아니면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인가? 대학생을 초·중등학생과 같이 학교 차원에서 통일교육 대상으로 분류하면 학교 통일교육

의 대상이지만, 통일교육 대상의 구분이 성년 여부에 따른 것이라면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00년 이래로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내용체계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학교용과 일반용의 두 가지 형태로 발간해 왔다. 그런데 대학생은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 어디에서도 분명한 교육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하는 『통일교육지침서』의 학교용과 일반용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통일교육원, 2013a; 통일교육원, 2013b).

2009년 10월 19일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대학도 통일교육의 진흥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학생은 학교 통일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대학생을 상정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대학생이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다. 통일교육이 헌법정신<sup>2)</sup>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국민교육임에도 기존 통일교육 체계 내에서 대학생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 1) 대학의 역할: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

대학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공식적인 대학 교육과정에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공 학생들이나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소극적인 통일교육 과정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전공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의 개설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변중현, 2012: 174; 이미경, 2014: 185).

2014년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2014: 38)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현 통일교육 횡수’에 대해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7.2%이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39.1%, 그리고 줄여야

1) 통독 전 서독의 통일교육도 학교와 사회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는데, 학교 통일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사회 통일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김창환 외, 2001: 14).

2) 통일교육의 목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3a; 2013b).

한다는 쪽의 응답은 3.0%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많은 기존 연구들도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수강할 의향이 높을 뿐 아니라 수강에 따른 교육 효과도 높다고 지적해 왔다(성장환·김영하, 2002; 정용하·김태완, 2005; 차승주, 2010).

그동안 통일교육의 강화 또는 확대와 관련해서 많은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논의들(이우영, 1997; 변중헌, 2010; 이미경, 2014, 312)을 참고할 때, 적어도 두 가지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통일에 관한 초보적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개설이다. 예컨대,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강좌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좌 개설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통일에 관한 심화된 관심을 유인할 수 있도록 통일 관련 전공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는 전통적으로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학과, 북한학과, 윤리교육과 등 소수의 학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전공 영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강좌는 정치학과 북한학, 국제관계학 등에서 전담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벗어나 북한문학, 통일경제, 북한경제 등과 같이, 여타의 다양한 학문 영역별로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독자적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교과목 내에서도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나 내용을 포함하여 강좌를 구성하는 것도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대학 차원에서 수행되는 가장 확실한 통일교육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남북관계나 통일에 관심을 갖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에 대한 수강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 유관 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과목의 개설뿐만 아니라 비전공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교양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다.

## 2) 정부의 역할: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 정립과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통일교육 담당 부처인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을 통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대학생이 모호한 통일교육 대상으로 방기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다. 우리 사회의 예비 엘리트인 동시에 통일교육의 핵심 주체가 될 예비교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 및 역량은 지속적인 통일논의와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통일교육에서 대학생의 위상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초·중등 대상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인 것처럼,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이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의 영역에 포함시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통일교육 진흥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자율성이 생명이다. 대학에 ‘통일교육 의무화’를 강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 예컨대, 과거 국책과목이었던 ‘국민윤리’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을 반공교육 또는 이념교육으로 보는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데 따른 거부감할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초·중등학생 및 일반 사회인들과 다른 제3의 관점, 즉 대학과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독자적·자율적 연구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의무화’로 풀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 의무화는 통일교육을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절의 반공교육과 같이 지배집단의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전락”(이우영, 1997: 50)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 상호간 경쟁을 유도하고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통일교육도 대학 자율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대학 통일교육 강화 취지에 부응하는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숭실대 간 MOU 체결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숭실대는 2014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점 교양필수과목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개설했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통일교육 확대 및 강화 조치에 부응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 6. 나오며

현재 국회에는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학교 통일교육 발전 공개 세미나

# 세션 I

## 지정토론

신희선 (숙명여대)

나동주 (전남교육청)

정지희 (통일드림)

신재표 (통일부)

박상화 (교육부)



#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편

- 신희선(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교수)

## I. 발표문에 대한 논평

발표자는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약화되고 있고, “대학생이 통일교육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함.

-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1) 대학내 통일교육의 취약성 2) 통일부 대학통일교육사업의 제한적 효과, 3) 대학통일교육의 모호한 위상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로서 대학 통일교육을 학교 통일교육 영역에 포함시켜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함.

### 1.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면서 통일 담론에 불을 지피고…통일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1쪽)”

<->

o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국정목표와 실질적인 대북정책 운용이 함께 진행되어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것임.

- 통일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으면, 생업으로 바쁜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봄. 즉 담론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이벤트 효과가 지속되어야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임.

### 2.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약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현황부터 살펴보자(4쪽)”

<->

o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약화가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에 원인이 있기 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어려운 취업 현실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깊게 사유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것임.

- 남북한간에 경제교류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와 연동되어 대학생들도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북한사회와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임.

- 또한 우리 사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충돌,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시각이 부재,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 등이 대학생들의 관심영역에 통일문제가 들어오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3. “1990년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학 내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를 맞았다……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 정부가 통일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북한학과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5쪽)”**

<->

○ 발표자도 5쪽에서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학 통일교육의 부침현상을 언급하고 있음. 즉 외부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학 내부의 통일관련 교과(전공)의 위상이나 대학생들의 관심이 달라져 왔다는 것은, 결국 대학 통일교육은 관련 교과의 시수를 늘리고 의무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임.

- 따라서 ‘9쪽’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대학 교육과정에 통일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발표자도 언급한 것처럼 과거 ‘국민윤리’로 통일교육 의무화를 했던 경험과 관련지어 볼 때 교과목 수강 기회가 없어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 정부의 입김이 투영된 전시용으로서 시류적 흐름을 띤 통일교육이라면, 교양필수로 제정한다고 해도 교육적 효과는 한계가 있음.

**4. "초중등 통일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들에게는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가 필수적인 교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5쪽)"**

<->

○ 교원양성대학의 경우는 통일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함.

- 초, 중, 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므로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과목이나 다양한 통일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

- 다만, 국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대학과 교수가 따라가는 중앙집권적 방식은 문제가 있기에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함. 즉 정권의 대북기조에 따른 안보교육이 아니라, 향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지도하는 교사의 소명과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 예컨대,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탈북자 대상 봉사활동, 통일캠프 등에 우선적인 기회를 주어 통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5.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대학내 통일교육의 ‘취약성’으로 통일관련 교과목이 한정되었다는 점과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하다(7~9쪽)”, “대학생은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 어디에서도 분명한 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9쪽)”**

<->

○ 통일교육이 어려운 점은 대학에서 통일관련 교과목이나 시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담당교수들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7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더 고민될 수 있음. 통일교육을 받은 후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 교수자의 필터링된 정치적 태도가 오히려 통일교육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대학생 통일교육을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차원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 다양한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마치 복지분야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 세대별, 계층별 필요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6.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다.(10쪽)”**

<->

o 통일관련 강좌개설을 유도하고, 모든 학문분야에 통일관련 주제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나아가 교양필수교과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대학통일교육을 이루는 방식일 수 있으나, 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와 통일교육의 궁극적인 효과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가의 측면임.

- 교양필수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거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단언할 수 없음.

o 요즘 대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무엇이든 찾아보는 경향이 있기에, 학생들 스스로 교과목에 대한 필요와 자발적인 학습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채 교필교과로 진행될 경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물론 대학생들이 학교 교육 보다는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접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통일교육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학생들의 수준을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 북한 관련 정보를 개방하여 다양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되리라고 봄. 과거 북한관련 서적이 금기시 되어 불온서적 소지로 처벌을 받고 지하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북한학 전공이 생기고 다양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북한 콘텐츠를 보며 비판하며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보다 오픈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

**7. “승실대는 2014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점 교양필수과목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개설했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대학내 통일교육 확대 및 강화 조처에 부응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11쪽)”**

<->

o 대학 최초로 통일부와 MOU를 맺은 승실대학교의 교육사례가 다른 대학에 통일교육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봄.

- 문제는 수강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의평가와 수업에 대한 반응이나 학습자 만족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대학통일교육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11쪽)”는 발표자의 지적이 타당할 것임.

- 또한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대<sup>1)</sup>의 경우 통일을 다양한 전공과 접목시킨 <통일과 환경>, <통일과 문화 예술>과 같은 융복합 교과목을 편성해 각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어떠한 성과를 보고 있는지 실천사례와 피드백 과정이 중요.

o 교육부와 함께 통일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을 유도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함.

- 예컨대 대학의 통일관련 강좌 및 프로그램의 개설 여부를 ACE 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대학들의 움직임이 이끌어내기가 보다 용이할 것임.

- 또한 각 대학이 ACE실시 교육결과를 공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각 대학의 다양한 통일교육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

## 8.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12쪽)”

<->

o 통일교육을 ‘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리라고 봄. 문제는 대학생 통일교육을 ‘누가’ 담당하며,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것임.

- 교육적 차원에서 정권이 변화할 때마다 통일교육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은 정권의 당파성과 무관하게 통일 미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틀 내에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교수학습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에,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먼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II. 대학생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 1. 대학통일교육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

o 각 대학의 필수교과는 대학의 정체성, 브랜드를 반영함.

- 정권적 차원에서 의무화할 경우 일방향 통일교육이라는 반발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 침해하고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대학교육에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1) “통일부-동아대, 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 협약”, <http://news.zum.com/articles/13783177>



- o 대학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이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대학 내 통일교육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총장들에게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
  - 예컨대 ‘총장협의회’ 등의 자리를 적극 활용하거나, 총장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원 사회지도층반을 운영하여 각 대학에 통일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
  - 학교 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대학 당국, 통일부,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o 대학 통일교육의 성격도 국민윤리교육 방식이 아니라 역사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인문학 교육, 시민교육, 리더십교육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필수교과보다는 교양핵심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
  - ex) ‘통일인문학’과정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상호 연계된 방식을 통해 접근하거나, 신입생부터 한 과목씩 대학생할 4년간 관련 교과목들을 교양핵심 교과로 선택 이수하게 단계별로 유도하는 ‘통일시대 리더십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ex) 숙명여대 2015년 1학기 교양선택 강좌로 <생활속의 북한 알기>(OCW / 3학점) 개설
  - “통일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로 시작 “남북관계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로 마무리하는 강의일정 각 분야의 전문가, 사회단체(1090평화와 통일운동)와 연계하여 팀티칭 형태(북한의 역사, 건축, 패션, 영화, 법, 경제, 대북교류, 동서독관계 특강, 토론)로 운영 예정
  - 북한의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북한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통일과정에서 어떤 기여가 가능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도록 하는데 교육 목적을 둬.

## 2. 통일친화적인 교육환경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제시

- o 대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대학생 통일논문쓰기, 통일 토론회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
  - 탈북학생과의 연결, 튜터제 활용, 자신의 장래 희망 등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로설계 등의 교과목이나 팀 프로젝트 과제와 연결하여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통일 관련 이슈에 자주 노출되는 계기 마련
  
- o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주간’, ‘통일문화주간’ 등을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교육봉사 등 봉사활동의 기회 제공
  - 2014.11월 개관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적극 활용, 참여형 통일체험 프로그램, 안보 현장 견학 기회 제공
  
- o 북한 및 통일관련 통일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자치 활동을 장려하여 대학생들의 체험의 폭을 넓히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것
  - ex) '숙명 아너스 프로그램' - 탈북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우면서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튜터링 봉사활동

### 3. 평생교육 차원으로 연속성을 갖고 통일교육 기획

- 통일교육은 통일 전 교육이 아니라 통일과정, 통일 이후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추진
  - 통일교육을 전생애 ‘맞춤형’으로 확산해 가는 방향으로 대학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준비
  - 평생교육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한 가치와 태도, 준비 역량을 갖추어 가도록 장기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
  - 실제 평생교육적 차원의 통일교육 전무한 상태이기에,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에서 남북갈등, 남남갈등,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확대<sup>2)</sup>

### 4. 무크(MOOK) 등 대학의 교육방식 변화 적극 활용

- 최근 대학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공개수업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활용하여 웹을 기반으로 상호참여적인 통일교육을 실시
    - 대학 강의방식이 BL(Blended Learning)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토론교육을 유도하는 방식의 수업을 통일교육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IPTV 통일교육 영상자료와 같이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대학 통일교육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언론과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방송, 뉴미디어를 교육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PBL(Problem Based Learning), BL(Blended Learning)처럼 교수자의 일방향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협동학습 방식을 통해 통일에 대해 생각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ex) 필수교과 < 선택교과 / 강좌 개설 <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참여 / 교수 < 학생중심 강의 < 토론식 수업 / 상대평가 < PF평가 /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콘텐츠 강화

### 5. 교육부 대학평가에 통일교육 여부 포함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sup>3)</sup>에서 가산점(대학 구조개혁 가산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가산점)을 주었던 것처럼, 통일교육 여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게 된다면 대학의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 2014년 ACE 자료들을 보면 각 대학들이 교양기초교육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이 관찰되는데, 이는 선정평가 지표에서 교양교육과정 구성·운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교양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한 결과, 대학이 반응한 것임.

2) 이범용, “지역사회 통일 진단과 발전 방향 - 학교와 사회통일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1회 통일교육주간 기념학술대회 『통일교육발전 전문가포럼』 자료집, 통일부 통일교육원, 한국윤리학회, 2013.5.31. 91쪽 참조.

3)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은 교육부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뜻하며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어 2014년에는 13개교가 신규 선정, 총 27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http://news.zum.com/articles/19349647>

○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6시간 이상, 통일교육주간에 계기 수업 2시간 이상 등 총 8시간 이상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 통일교육 추진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sup>4)</sup>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처럼, 대학평가에도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 및 프로그램 여부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학내 변화를 추동하게 될 것임.

### III. 향후 더 숙고해야 할 문제

-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 대학 통일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대학 통일교육을 필수화 할 경우 교육적 효과와 역효과는?
- 대학 스스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대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 “대학생 통일교육 필요하다”면 현재 대학통일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일교육을 의무화할 필요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대학 사회 전체의 인식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

- 젊은 세대들의 통일 의식이 미흡하고 통일교육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대안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 현장체험의 확대와 다양한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될 것임.

○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민족의 과제이기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이 중요.

- 통일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체계와 콘텐츠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검토와 각 교육단계별 연계성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 필요.

- 특히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방지하고, 혹은 정권 및 북한에 대한 편향된 인식의 교정을 위해 올바른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통일을 대비하는 인식, 태도,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이 필요.

- 통일이 된 이후의 장밋빛 환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학생들과 함께 모색해 보는 대학통일교육이 되어야 함.

- 대학내 통일교육 확산과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통일부와 교육부의 긴밀한 협력하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요청됨.

4) 안재희, “교과의 통일교육, 3월 신학기부터 년 8시간으로 확대”,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242>



##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성찰과 모색

전라남도교육청 장학담당장학관

교육학박사 나동주

### 1.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발제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아니며, ‘우리의 선택’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기반하여 주제를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sup>1)</sup> 다소 단정적이고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간과라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장의 근본적 생성과정에 동의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더 이상 이념교육이 아닌 통일한국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교육으로 발상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다만, 반공교육 세대가 아님에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북한이탈학생들을 부정적(왕따와 폭력)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확인하였다는 발제에 대하여 논리의 비약을 발견할 수 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그 적대감이 일반적인 감정의 표출로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련의 북한 무력 도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북한을 위협과 경계의 대상에서 민족적 동질관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발제자의 현실 인식이 아직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따라서 핵문제, 미사일 문제, 대남 비방방송문제 등의 적대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안보에 관한 균형감 있는 북한관의 정립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2. 학교통일교육 현황과 실태에 관하여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 관련 교육 경험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사실에서 포착해야 하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 및 경험의 제공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제안이 부재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토론자의 제안은 학교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백일장 등을 통일교육과 연계하고,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전개, 통일관련 시사반 운영, 통일마라톤 및 문예대회, 분단의 상징 지역 현장 체험학습 등을 권장하고자 한다.

1) 통일은 ‘우리의 소원’인가, ‘우리의 선택’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근거: 통일문제 이해(2014), 통일교육원.>  
- 통일의 필요성 인식 → ‘반드시 통일’ 보다 ‘국민 부담이 없다면’이라는 답변이 우세함(24%→45%)  
-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 →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서(49%)

둘째, 통일교육에 대한 노출빈도가 많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보다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해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발제는 사실 충격으로 다가온다. 발제의 내용처럼 통일 관련 정보 채널이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수업이라면, 중·고등학생들은 각종 메스컴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통일에 관한 지도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지도 분량도 초등학교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중·고등학생이 각종 메스컴을 통해 통일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이 시사성, 정확성, 신뢰성 등에 기초한다고 보았을 때, 각종 메스컴을 통한 통일교육의 순기능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 관련 학교급별 지도 영역 수(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과	사회과	도덕과	사회과	역사과	도덕과	사회과	정치교과	역사과
4단원	6단원	2단원	1단원	3단원	2단원	3단원	1단원	1단위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의 내용에 의하면 많은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장애물로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63.9%)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많은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경험적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수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써 매년 100명(5년간 500명)의 교사들에게 백두산권 현장 연수를 추진하여 가슴으로 느끼는 ‘교사 통일 리더캠프’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발제자는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통일교육 이수 시간을 조사했는데, 많은 중·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통일교육을 소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의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 영역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인 통일교육을 융통성 있게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6개의 범교과 주제를 제시하면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에서의 통일교육 이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 3. 학교통일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첫째, 발제자는 초·중·고등학교에 독도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견주어 통일교육은 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토론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독도교육을 포함하여 무려 1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일

교육은 없다. 이 얼마나 근본적 모순인가? 따라서 시급하게 통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둘째, 최근 3년간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적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순기능과 역기능이 양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그 대상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통일교육원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2014년에 전국 27개이던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2015년에 12개로 감축하였다.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즉, 통일문제는 특정집단이나 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한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이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통일미래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통일문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 통일 무관심은 들을 기회가 적었던 탓’

정치희

앞으로 통일한국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적어지는 것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과 북한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통일한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통일교육 전문가로서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다보면 첫 만남에서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확연한 차이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육 시범학교나 탈북학생 연구학교, 또는 통일동아리가 있는 학교, 통일관련 체험 활동이나 관련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통일 문제를 우리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질문도 구체적으로 하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들과 통일이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각 자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적거나 없었던 학생들은 통일관련 북한관련 이야기에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듯이 통일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탈북강사님들이나 탈북학생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탈북강사님들이나 탈북학생들에게 ‘탈북과정, 북한주민들의 생활 모습, 북한학생들의 학교생활, 남한생활 정착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하며 남한과 북한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들에 대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공감했으며, 강의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관련 자료들을 부탁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통일교육의 기회가 없거나 적었던 학생들은 탈북강사님들과 탈북학생들에 대한 생소함에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무관심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관심하던 학생들도 통일교육 시간을 통해서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그 이유들을 같이 토론해보고,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며, 객관적, 주관적인 의견들을 함께 모으고 생각하다 보면 통일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화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첫째,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정규과정 안에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통일교육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남북 분단의 역사와 아픔, 폐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통일을 우리민족의 당위적 과제로 여기며 통일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우며 통일준비를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시간을 임의적으로 따로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40여 가지의 다른 교양 프로그램들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통일교육이 같은 입장에서 시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간 학교 통일교육 시간이 의무화 되어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관과 미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획의 장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참여형 활동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많이 개발되고 학교통일교육 시간을 통해서 보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남북 분단의 과정,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북한 주민들의 생활모습, 소모성 분단비용과 투자성 통일비용의 가치, 통일과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무한한 통일의 편익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참여활동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많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능동적으로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개발된 참여형, 체험형, 놀이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 참여했던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으며,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발표했던 통일관련 내용들에 더욱 더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많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의 어른 세대들이 통일준비를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이 통일교육 시간에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통일교육 강의 후에 한 고등학생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른들은 통일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란 말을 들었을 때, 기성세대인 어른으로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학생들의 눈에는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서 통일을 위해서 다각적인 준비를 해온 어른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남북간의 대립, 북한 정권의 핵무기개발 등의 어렵고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보여져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온 많은 사례들과 통일준비 과정들을 청소년들에게 잘 소개하고 또한 북한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민족적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사례들을 소개하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통일한국의 긍정적인 측면에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준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통일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통일준비, 통일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학교통일교육 시간에서 형성된 학생들의 통일찬성 의견이 교실안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도는 줄어들 것이고 효과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제시하고 공유하며 함께 고민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통일관련 동영상, 단편영화 등의 ucc제작대회, 스피치대회, 통일동아리 연합한마당, 청소년 통일단체활동, sns경진대회, 통일준비캠페인이나 통일준비관련 봉사활동 등의 검증된 통일교육 우수 프로그램들이 이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통일인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되며, 미래의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통일준비에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낮았던 것은 통일한국을 생각해볼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고, 학교통일교육의 기회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통일준비의 물결이 일어나

고 있는 지금에, 학교통일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통일한국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통일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학교통일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신재표(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팀장)

## 1. 서론

금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으로 의미 있는 한해로서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원년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상황이다.

김해 대청고등학교 정향진 교사께서 발표한 대로 지난해 6~7월에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통일부·교육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초·중등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통일의 필요성 53.5%)은 매우 낮다. 특히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초등학교 71%, 중학교 54.3%, 고등학교 47.8%)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사들은 통일교육 관련 △교과 시간(연간 3~5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연간 2시간 이내)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는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대 되었고, 중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 통일교육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중학교 2학년에서 주로 다루어져 교과를 통한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중학교 2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통일관련 내용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일선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39개 범교과학습 주제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모두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대학교 고경민 교수께서 발표한 대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실태(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0년 74.7%, 2011년 68.9%, 2014년 61.5%)를 살펴보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지만, 해가 갈수록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 둘째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당위적 인식에 대한 비중이 현실적 이해관계나 실용주의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0년대 중후반 국내 6개 대학에서 개설되었던 북한학과는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학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북한학과의 폐지나 유사학과의 통폐합 등으로 현재는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만 남아 있고 입학정원도 축소된 것이 대학 통일교육의 현주소이다.

## 2. 학교통일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통일준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통일인식 함양을 위해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차 다가올 남북한의 통일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sup>1)</sup> 앞서 주제를 발표한 두분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학교통일교육 개선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통일교육 필요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참여·체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체험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지난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기존 강의식에서 대상별 맞춤형 놀이교육으로 전면 개편하여 실시한 결과 학교현장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금년부터 동 사업을 확대(556 → 1,000개교) 할 계획이며, 또한 “통일리더캠프(국내, 국외 연간 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등 5,800여명)”, “청소년통일문화경연대회”,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50개 초·중등학교)”, “통일부 어린이기자단 확대 모집(150 → 300명)”,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54개 초·중등학교)” 등 참여·체험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영상자료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와 청소년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둘째, 유관 기관간(통일부-교육부-시도교육청) 협업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필요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일선 학교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금년 5월말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통일부-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과 외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계기 수업 등을 통해 연간 8시간

1) 청와대 뉴스(2014), NO. 416 2014 03 28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대통령 연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이상을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개정을 통해 △비중 확대(통일교육 단위 확대), △질적 개선(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현실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 내용 및 서술방식 개선), △내용체계 개편(통일을 준비·촉진하는 교육에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통일교육의 범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학교통일교육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셋째, 대학 통일교육 강좌 개설학교 확대 필요

통일부는 대학사회 내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전한 통일논의 확산을 위하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전국 75개 대학 80개 연구소)를 통해

“통일아카데미 개설”, “통일포럼 지원”, “통일 동아리 지원”, “통일 공모전 (UCC, 스토리텔링 등)”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가 직접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통일논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또한 교원대를 중심으로 매년 200여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통일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더욱이 각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체결(숭실대 등 4개 대학)하여 △강좌개설을 지원, △통일부장관 특강, △통일교육 공동연구, △콘텐츠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학사회 내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전한 통일논의 확산을 위해서는 통일교육 강좌 개설대학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국고보조금 지원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넷째, 일선 학교장 및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신념과 의지 필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제도 마련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에 계신 학교장 및 담당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다양한 콘텐츠가 학교현장에 보급된다 할지라도 학교장 및 담당교사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일선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을 확대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연간 60여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으로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일선 학교장 및 담당교사들의 노력으로 미래 통일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 통일교육 발전 공개 세미나 : 분단 70년, 청소년 통일의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내실있는 학교 통일교육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 박상화

교육부에서는 통일부(통일교육원)와 협력하여 학교 통일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루어지는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수업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터넷 통일학교’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격 연수 및 집합 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통일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독일 통일-역사교육 포럼 및 교원 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주관하는 통일부(통일교육원)에서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시범학교, 연구대회, 교원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협력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에 통일부와 협력하여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결과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3.5% 수준에 머물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19.7%나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었다.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학교 교육 차원에서만 살펴본다면, 통일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정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덕, 사회, 한국사 등에서 다루어지는 통일 관련 내용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체계성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은 계기교육 형태로 외부 강사 강연이나 현장 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일교육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다루지 않게 되기도 한다. 학교 교육 외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잦은 도발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준비와 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학교 통일교육이 이런 외적인 환경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큰 맥락에서 통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의무

화와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대학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발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의무화에 대한 부작용과 거부감을 지적한 반면, 초·중등 교육에서는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 통일교육의 의무화, 특히 일정 시간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게 하는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기본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가 시간과 비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실기나 기능 교육은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그 교육적 효과가 드러난다고 본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그런 기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측면에서 내용에 대한 암기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인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과 통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반드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강제적으로 부과된 수업 시간은 자칫 파행 또는 부실 운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통일교육의 의무화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학교 통일교육 시간(연간 8시간)을 권장 수준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교과목의 통일교육 비중이 확대되고, 내용적 체계성·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당위론적인 측면과 실리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사적인 측면에서의 당위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리성을 모두 깨닫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위성을 강조한 통일교육은 체험을 통하여 느끼고 깨닫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리성을 강조한 통일교육은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의 통일 이익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당위론에 치우치면 논리가 없는 통일교육이 될 수 있고, 실리론에 치우치면 이익이 없으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런 당위성과 실리성을 모두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위성과 실리성을 모두 아우르는 학교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남북간의 이질성과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러한 장애 요인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통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 발전 공개 세미나

## 세션 II

# 종합토론

조정아 (통일연구원)

전영선 (건국대)

김형석 (새누리당)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검토의견

조정아(통일연구원)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의 통일교육 의무조항(제8조(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일교육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반영하여야 함.) 및 제9조 제1항(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한 통일교육 의무화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의무화’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일정 시간 이상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발제문에서 지적한대로 과거에 국민윤리 교과 이수를 필수화했던 것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일교육 강화 취지를 살리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장려하고, 특히 교직과정 이수자들에 대해서는 통일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나 대학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관리자 통일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교원과 중앙·지자체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통일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교육의 장기적 목표와 대북정책 홍보의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즉, 통일 환경이나 국제정세, 대북정책, 남북관계 등이 변화할 때마다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하는 정책홍보와,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설계하고, 그를 이루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가치, 태도, 능력을 기르는 통일교육을 구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권

교체와 대북정책의 변화는 곧바로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의 전면적인 변화로 이어져온 경향이 있다. 통일교육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지만, 통일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것과 정부 정책의 '홍보'로 통일교육을 대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태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 대상, 주체에 따라 통일교육의 이 두 가지 사회적 기능을 기본적으로 분리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결합해나가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정책홍보보다는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과제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료화 작업을 거쳐, 이러한 가치를 통일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성과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민·관·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교육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담론의 변화와 쟁점들에 관한 다양한 입장 차이가 표출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합의의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으로 합의된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맞게 통일교육 내용을 개편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시대적 변화와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을 연결시켜내면서 청소년들이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 상황으로 자각하게 만들기보다는 여전히 통일에 관한 지식을 주입하고 통일을 계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존 통일교육이 주로 통일과 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구체적인 통일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학습자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지식 전달에서 통일역량 함양으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그 핵심은 '함께 살

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그 자체를 통해 남북간의 정치적 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제도적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촉진하거나, 통일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동질성의 기반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통일은 제도의 단일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주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수십 년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 주민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체험을 필요로 한다. 통일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남과 북 상호간의 갈등을 창조적이고 평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삶을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가치관 차이와 이해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이의 수용, 공존, 민주적 의사소통, 공감, 성찰,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등이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통일역량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북한과 통일문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남북한 사회통합에 필요한 민주적, 관용적 사고와 태도, 정서를 함양하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각 교과에 편성되어 있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문화간 감수성 교육), 평화교육 등을 통일 미래와 연결시켜 교육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역량 함양교육이 범교과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의무화가 의미를 지니려면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일선학교 교사와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실제 수업에 활용할 때, '통일교육 의무화' 법안 개정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통일교육

전영선(건국대학교)

## 1. 광복, 분단, 통합

- 광복 7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 70년전 광복의 의미를 되새김하자는 것인가? 70년 동안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축하자는 것인가? 광복 70년 동안 분단된 남북의 현황을 성찰하자는 것인가? 광복 70년 이후의 과제를 발굴하자는 것인가? 나아가 광복 80년, 광복 90년, 광복 100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광복 70년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단’, ‘통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화두임. 분단은 광복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통일은 온전한 광복의 의미를 회복하는 문제임.

## 2. 통일교육 현황

- 분단의 유산화
  - 광복 이후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분단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약화되고 분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단의 유산화’ 현상이 발생함.
- 통일문제에 대한 일정한 프레임과 시각으로 세대차이가 커지고 있음.
  - 분단 이후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력이 약화됨. 경험을 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공감력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

- 공유하지 않은 경험은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음. 분단 문제나 통일문제는 체험한 세대와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동일한 경험을 가질 수 없음.
- 통일의 가치, 의미, 비전에 대한 논리화 필요해 짐. 최근 통일문제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논의가 통일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통일의 실현성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약해짐. 분단문제·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인정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 필요함.

○ 통일은 사회구조 전환 문제

- 통일은 통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하는 전사회적인 문제. 통일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
- 통일이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통일이 우리 사회가 감당할 미래의 문제라면 마땅히 통일을 대비하는 사회구조의 대응(전환?)이 있어야 함.
- 통일교육 문제도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인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부분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 분야의 문제가 아닌 기반의 문제

### 3. 통일은 교육되는 것인가?

○ 통일문제의 인식 차이와 스마트 통일교육

-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최적화된 교육이 필요함. 세대별 교육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 콘텐츠와 교육기법, 교육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 통일 풀뿌리 교육

- 통일교육의 의무화는 통일문제에 대한 기반 구축의 문제임. 초중고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미래의 문화다양성 교육, 갈등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함.

○ 통일과 사회기반 교육

-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보다 현실적인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보다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함. 당위적 차원의 접근을 지양하고, 분야와 진로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

## 5. 통일교육 질적 전환이 필요함

○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과 통일교육 인력의 전문화

- 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통일문제가 전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함.
-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문화, 예술, 교육 등등 분야별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함.
- 통일교육원을 비롯하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 인력의 전문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함.

○ 통일교육의 양적 성과에서 질적 성과로의 정책 전환

-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전문가, 통일교육협의회 등의 통일교육 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특히 대학교육을 비롯하여 통일교육자의 전문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통일교육의 전문성, 대학의 재정 여건

- 통일교육 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K, HK사업에 준하는 ‘통일한국학사업(가칭 UK사업)’이 필요함.
-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일문제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일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국가교수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일교육원에서 관리하고 파견하는 교수요원으로 대학과 협의하여 연구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 시수 이상의 통일교육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입.

☐

# 통일교육 실태 및 발전방향

2015.2.25.

김형석 새누리당 통일수석

## 1. 분단 70년 의미

- 통일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미래를 위한 실천적 과제임.
- 통일을 통해 이산가족 등 분단 70년의 아픔을 해소하고,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21세기 새로운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함.
  - 통일비용에 집착하기 보다는 분단비용을 생각하고 통일투자와 통일편익을 고려
- 앞으로 20-30년후 세대는 지금과는 다른 남북관계, 남북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생활 할 것임.
  - 이러한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토대로 할 때 가능함.
-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 가기 위해서는 통일시대에 맞는 문화적 변화와 통일 준비가 필요함.
  - 통일이 내 자신의 문제이자 나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인식(통일문화)
  - 사회 각 분야별로 남북 통합과 통일에 대비한 준비(통일준비)

## 2. 학교통일교육 실태

-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의식 함양과 통일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
- 현재 입시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학교에서도 통일에 대한 교육이 형식화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움.

- 초·중등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교에 있어 통일교육도 취업과 사회적 관심도 저하 등의 이유로 북한학과 폐지 등에서 보듯이 약화되고 있음.

### 3. 통일교육 발전 방향

- 전국민· 전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문화가 유행되어야 함.
  - 문학, 건축, 미술, 산업계 등 사회 전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한 논의가 활발
  - 통일이 특정단체나 특정분야 주제가 아니며, 우리의 삶속에 통일이 녹아 들어가야 함.
- 통일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함.
  - 학년 변화에 맞는 맞춤형 통일교육과 함께 통일문화제 등 참여형·체감형 통일교육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적극 활용, 지역별 통일체험센터 설립 운영 검토
- ‘평화통일박물관’ 등 한반도 분단역사와 통일과정에 대한 소통 공간 마련으로 통일문화의 지역사회화도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에 필요
  - 청소년 포함 일반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고민과 토론의 장을 제공
  - 분단과 통일사에 대한 역사적 사료의 체계적 수집과 전시 활용은 통일의식 제고와 우리사회 통일담론 활성화에 기여
- 국가미래를 위한 통일의식 제고와 통일문화 확산 차원에서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상 통일교육에 대한 의무성을 강화할 필요. <끝>

##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문제인식

김종수(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가 통일교육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
-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이며, 안정된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정권의 부침 없이 안정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임.  
통일부의 통일교육 예산이 이명박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사실을 상기하고 이러한 사례가 주는 교훈을 잘 살려야 할 것임. 즉 남북교류 협력이 잘 되는 상황에서도 통일교육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정향진 선생님의 발제문에서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일교육 이후 1, 2학년 모두 통일에 관심이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는 답변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하는 것에서 통일교육 강화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함.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의식 및 태도적 측면이 모두 감소”한다고 하는데 ‘입시’위주 교육 현실에서 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함.  
이런 차원에서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의무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동의되는 부분임.
- 대학통일교육 부문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통일부에서 대학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으로, 아님 사회통일교육 중 어느 영역에서 다룰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인적으로 학교 영역으로 하면 편리성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이유는 대학이 학교이긴 하나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고경민 교수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대학 통일교육 개선 방향, 즉 통일교육 기회 확대, 대학 통일교육 위상 정립과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제안이라 생각함.

학교통일교육과 연계해서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에서는 통일교육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기에 통일부와 교육부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봄. 콘텐츠는 통일부, 실행방안은 교육부가 맡아서 하되, 구체적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생각함. 통일부만큼 교육부가 통일교육이란 주제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학은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갈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임. 대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길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유인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방침이 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 정부는 통일준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칭 '통일시민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단의 문제점,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노력, 북한에 대한 이해, 독일통일의 교훈, 다양성의 이해, 다름의 존중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함. 이런 사업을 교육부가 지역별로 통일교육 활성화 대학을 공모, 선정하여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사업대상은 대학생과 지역주민 등으로 개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